

청년학개론

# 청년 연구자 되기



“청년 개념, 어떻게 의식할 것인가?  
청년의 실천, 어떻게 연구되어 왔나?  
무엇이 '청년 문제'로 연구되어 왔나?  
청년연구, 어떤 한계로부터 어떤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 목차

서문 첫 청년학 교과서를 펴내며 / 김선기	8
-------------------------	---

## 01 청년 개념,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1장 ‘청년 세대’의 사회적 구성 / 정성조	24
2장 ‘이행기 청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변금선	50
3장 권리 기반의 접근: ‘청년’의 탈신비화를 위해 / 정준영	80

## 02 청년의 실천, 어떻게 연구되어 왔나?

4장 ‘청년의 제도정치 참여’ 연구의 확장을 위하여 / 박희정	106
5장 여성청년의 실천과 페미니즘: 디지털 액티비즘으로 무장한 청년 페미니스트의 탄생 / 미현	128
6장 청년운동연구, 현장과 이론의 경계에 서기 / 정보영	146
7장 청년세대의 정주와 이주 실천에 관한 연구들 / 채태준	172

## 03 무엇이 ‘청년 문제’로 연구되어 왔나?

8장 청년과 노동: 무엇이 어떻게 청년노동 문제로 다뤄져 왔는가? / 문수연	192
9장 청년연구에서의 청년들 간 다름과 불평등 간의 동학: 세대내 이질성의 증가와 청년 불평등의 복합성 / 김정환	228
10장 ‘청년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 위기와 세대 간 불평등 담론 사이에서 / 조민서	262
11장 청년 주체, 읽기와 쓰기 / 천주희	290
12장 인구감소시대의 청년 삶이 / 권민경	316

## 04 청년연구, 어떤 한계로부터 어떤 대안으로?

13장 숫자 안의 청년, 숫자 밖의 청년: 청년 연구자를 위한 통계활용의 의의와 한계 / 정세정	354
14장 청년-질적연구하기의 위기와 성찰 / 권수빈	378
15장 정책적 실천과정으로서의 청년정책 연구: 현황과 과제 / 서복경	410

## 서문

### 첫 청년학 교과서를 펴내며

####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2009년 <고함20>이라는 인터넷언론을 통해 청년활동가들과 만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청년 담론 및 청년활동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다양한 위치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 주변에 있는 여러 욕망들에 대해 고민하다보니 본래 전공은 문화연구이지만 학제를 넘나들며 범람하는 지식들과 씨름하고 있다. 단독저서로 <청년팔이 사회: 세대론이 지배하는 일상 뒤집기>, 논문으로 <청년-하기를 이론화하기: 세대 수행성과 세대연구의 재구성>,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정책거버넌스 현상 읽기: 청년당사자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등이 있다.

## 왜, ‘청년학’을 말하는가?

청년학이라는 단어는 어색하다. 우리가 이전에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생겨나는 새로운 학문 분과들은 ‘학(-logy)’보다는 ‘연구(-studies)’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연구대상을 청년(youth)으로 삼는 연구들 역시 이미 청년연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량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상황에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듯 보이기도 한다. 어색한 단어를 굳이 자꾸 말하려는 것은 견고한 칸막이로서의 청년학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야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청년연구가 가진 경향의 한계를 상기시키면서 청년을 연구한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자세를 비틀어보려 하는 의도에서 하는 일이다. (즉, 우리는 청년학을 말하며 교과서를 쓰지만 그 ‘비틀기’를 위해서라면 거기에 필요한 말이 꼭 청년학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기존 청년연구에서 세 가지 정도의 한계를 인식하였다. 이 셋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첫째로, 기존의 청년연구는 개별 분과학문의 문제설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수많은 학회와 학술지에서 ‘청년’을 특집과 기획으로 다루고 있지만, 사회학의 연구냐, 문화인류학의 연구냐, 사회복지학의 연구냐, 경제학의 연구냐 등에 따라서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상호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듯 보인다. 최근 청년당사자운동에서는 “청년의 삶은 행정의 칸막이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와 같은 구호를 통해 ‘청년’이라는 삶의 주체를 구획하고 분절화시키지 말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술 장에서 통용되는 청년에 대한 지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터인데, 사회학적 청년과 사회복지학적 청년, 경제학적 청년이 실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조금 다른 계기를 통해서 만나고 새롭게 조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분과학문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청년연구는 ‘청년의 관점’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청년은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니므로 무엇이 청년의 관점이고, 무엇이 청년의 관점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선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분과학문적인 문제설정으로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온 연구들로부터 ‘대상화’된 청년 당사자들이 이 연구

들에 불편함을 느끼고 발화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분석이 연구대상인 청년 자신의 사유를 오히려 소외시키며 ‘타자화’하는 바로 그 청년연구들에 대해서다. 예컨대 사회학이나 문화연구에서 대중의 주체성을 문제로 삼을 때 이를 청년 대중으로 좁혀 연구하는 청년연구는 청년에 대한 세대주의적 고정관념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몇몇 경제학 연구에서 청년은 취업률로, 인구학 연구에서 청년은 혼인율과 출생율로 치환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자-활동가 그룹이 가장 원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관점이지만 현실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다.

셋째로, 기존의 청년연구는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청년’이라는 기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청년이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어 오히려 방해물이 되기도 했다. 청년은 연구의 주체가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만 남는다. 원인은 중층적이겠지만, 가장 직관적으로는 만 19~34세의 청년에게 학위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술 장에서 통용되는 전문성의 기준인 석·박사학위, 나아가 교수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지위는 청년 당사자 연령대에서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청년학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청년학’은 지식의 체계라기보다는 하나의 계기를 말한다. 청년학은 이전에 정의된 바 없으나, 또한 아주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내리는 것 또한 불가능하지만, 분과학문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이전의 청년연구와 구별되는, 다른 방식으로 지식과 연구자와 사람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청년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수행적 모순을 범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아동·청소년학이나 국외의 청(소)년학(youth studies), 청년세대에 대한 세대사회학, 여러 분과학문의 청년코호트 연구 등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청년’ 현상과 관련된 다학제적이고 종합적인 탐구, 그리고 그것들의 연결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청년학’을 사용한다. 그렇기에 청년학은 기존의 지식 체계가 공인해 온 분류 및 범주에 잘 들어맞지 않아 계속해서 잔여로 남아 있던 청년의 실존과 ‘청년’ 관점을 가시화하는 방편으로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학계의 ‘청년’ 지식 만들기에

### 개입하는 청년 연구자의 방식

우리가 청년학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국면적 요인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야 하겠다. 2020년은 청년당사자운동의 오랜 염원 — 이 법안은 여야가 모두 주장한 무쟁점 법안이었으나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고 5년 이상을 계류 상태에 있었다. — 이었던 청년기본법이 드디어 제정(1월)되고, 시행(8월 5일)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한데, 뒤늦게 급물살을 타 2020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는 원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몇몇 조문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에 관한 항목이었다. 한마디로 청년활동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법이 제정되어 버린 것이다.

혹자는 청년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정부에 편향적인 시민사회에 돈을 퍼주는 일, 혹은 정부의 시민사회 관리 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허나 이는 청년정책이 그동안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국내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은 ‘청년활동가’ 혹은 ‘청년당사자’라는 이름으로 현장의 활동가, 실천가, 혹은 당사자들이 이론과 학위 등을 기반으로 한 소위 전문가 집단을 앞질러 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일자리정책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던 청년정책은 당사자들의 요구를 등에 업고 점차 제도화됐다. 이러한 정책 발전 원리에 충실한 제도를 설계한 몇몇 지방정부의 경우 ‘청년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청년정책 설계의 핵심에 두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정책 및 지방정부 정책 전면에 개입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청년단체 및 청년 주체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행정 사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청년 참여기구 등을 활성화하여 온 것이다.

청년정책의 형성 과정은 ‘누가 전문가로 인정받는가’ ‘인정의 기준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라는 발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심의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의 현장이었다. 여기서 당사자와 전문가라는 이분법은 이미 도전받았고 종종 다른 차원을 열어젖혔

다. 행정은 그동안의 관성에 따라 ‘청년 문제’를 연구한 적은 없지만 박사학위와 교수라는 직함이 있는 학자, ‘청년 문제’를 다룬 경력은 없어도 지역 청년들을 고용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다며 위촉되는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으로 청년정책 관련 기구의 명단을 채웠다. 그러나 청년 당사자라는 이름으로 호명된 청년들이 오히려 그들의 전문성 없음을 폭로하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행정적 자격이 없는 주체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증명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청년기본법은 이러한 전문가와 당사자의 이분법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청년단체와 같은 당사자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지만, 청년연구기관과 청년정책 연구시설은 청년기본법 조문에 남았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해온 청년 시민사회에 대한 ‘인정’은 불가능하고,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 체계의 상단에 있는 학술/연구라는 영역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형국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중립과 객관이라는 신화 속에 갇혀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실상 가장 정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고 그럴 필요도 있는 연구는 ‘객관’이라는 말로 포장해 오고, 오히려 어쩌면 가장 이익단체와는 먼,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식의 객관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및 시민들에게 편향의 딱지를 붙여온 역사적 관성 말이다.

‘청년’의 관점으로 청년에 대한 연구를 생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어온 청년 연구자로서, 우리는 청년 당사자를 지식 생산의 주체에서 제외하고 ‘청년’ 지식을 생산하는 일을 당연히 승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그 방향이 선명했다. 청년당사자운동은 제도의 폭력성이나 불안정성을 마주했을 때 그 제도 바깥으로 튕겨 나가서 우리만의 대안적 기지를 만드는 방식, 혹은 그 제도를 무용한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제도가 억압적일수록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안으로부터 고쳐내려고 노력했다. 청년 연구자들도 청년 당사자-활동가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 역시 기존의 학술 장에서 생산되는 청년연구, 그리고 그러한 청년연구가 청년에 대한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문화나 제도적 압력

을 이겨내기 위해서 ‘학술적인 방식’의 개입을 시도한다. <청년연구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쓴 ‘한국의 첫 청년학 교과서’인 이 책은 그 개입의 첫 단추이다.

### <청년연구자 되기>,

#### 어떻게 만들었나?

이 책을 함께 편집한 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팀은 ‘한국사회의 문화정치에 개입하는 젊은 문화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기존에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제를 연구한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청년 활동가와 청년 연구자의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활동가들이기도 하다. 2020년 5월 작업에 착수하면서, 우리는 2016년 수행했던 ‘청년연구 아카이브 작업’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나와 있는 청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및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을 찾는 일에서 시작했다. 청년 활동가, 연구자, 출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5명의 필진을 섭외하였는데, 그중 80%에 해당하는 12명이 만 39세 미만의 젊은 연구자였다. 연령을 기준으로 해 젊은 필진만을 배타적으로 섭외하려 한 것은 아니며, 청년 의제와 관련하여 인상적인 연구물을 발표한 경력이 있으며 가능하면 청년당사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실천, 사회운동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를 섭외하려 애썼다. 2020년 9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청년 활동가와 연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쳤고, 11월 최종고가 나온 이후 교정 및 교열을 거쳤다.

어떤 독자를 상정하고 글을 작성하고 책을 기획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청년연구를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청년활동 영역에서 쌓은 문제의식을 향후 연구로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대학교 고학년의 청년활동가, 내지는 청년 문제에 대해 학위논문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대학을 통해 적절한 청년 관련 커리큘럼을 제공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활동 기반의 청년들에게 적절한 참고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 연구라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현장에서 청년연구 사업을 기획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때, 스스로 연구해야 할 때 펼

쳐 공부할 도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이 현장과의 연결고리 없이 청년연구를 하려고 하는 기성 연구자들에게도 하나의 참조점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청년 관점’이 없다고 여겨지는 기성 연구자에 대해 반박 및 대응하거나 혹은 자문 역할을 하게 될 당사자-활동가 그룹이 이 책에 담긴 내용 중 어딘가에서라도 약간의 기초적인 담론적 무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연구자 되기>라는 책의 제목은 우리가 ‘청년학 교과서’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청년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라 할지라도 혹은 학술적 훈련을 통해 이미 ‘연구자 되기’를 겪은 누군가라 할지라도, 별도의 ‘청년-연구자 되기’가 필요함을 말하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목을 ‘청년, 연구자 되기’로 끊어 읽어도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 청년 영역의 당사자성이 전문성과 별개로만 인식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성 또한 충분히 전문성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청년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그러한 기획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교과서는 그러한 기획에 필수적인 훈련의 유용한 재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과서 내의 여러 챕터들은 최소한 연구의 대상으로 고정된 청년이 아닌, 일정한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무언가의 실천 속에서 청년이라는 형상 자체를 유동시키고 있는 청년이라는 전제를 공유한다. 그러나 챕터별로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에는 여전히 온도 차가 있고, 이는 필진들이 각자 ‘청년’이라는 말과 관련해 서 있는 위치성과 체계적으로 연관된다. 예컨대 활동가로서의 경력이 좀 더 우세한지, 학술 장 내에서 ‘청년’을 다루는 방식에 더 익숙한지에 따라, 혹은 필진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논의의 구체적인 결에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챕터에서는 ‘청년’을 실제의 청년층 인구를 구체적으로 지시대상으로 삼는, 즉 인구집단을 지시하는 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청년이라는 정체성으로 호명되는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다소 무관하게 ‘청년’이라는 말 자체에 집중하는 담론적 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연구자는 ‘청년’의 생애주기적인 성격, 즉 이들의 연령코호트로서의 특징에 주목하고, 어떤 연구자는 ‘청년’의 세대적인 성격, 즉 이들의 출생코호트로서의 특징

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필자들이, 또 이 책의 독자들이 이러한 차이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교차시켜가면서 토론을 이어나가, 각각의 학문 영역 안에서의 안전한 논의에 머무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청년연구를 진정으로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청년학으로 만드는 작업을 함께해주기를 바란다. 즉, 이 책에 드러나는 이질성이 생산적인 차이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소 미진하거나 아직까지는 그 결합 정도가 높지 않을지언정 서로 다른 접근들이 그 간 어떻게 ‘청년’이라는 형상을 파편화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고자 한다.

## 본문의 구성

###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단행본으로 묶인 <청년연구자 되기>는 편집진의 기획에 따라 서사적으로 순서를 배치하였다. 우선 1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한국에서의 청년연구에서 유용한 참조점이 되리라 생각하는 세 가지 이론적 키워드(교차성, 이행기, 권리)를 담았다. 2부는 오늘날 청년층이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청년정치, 페미니즘, 청년운동, 라이프스타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들의 실천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3부는 그동안 청년연구를 통해 어떠한 지점들(노동,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주체성, 인구감소)이 ‘청년 문제’로 규정되어 왔는지, 그 규정 작업에 청년 당사자들은 얼마나, 어떻게 개입하여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청년 문제’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인지를 일별한다. 4부는 기존 청년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연구 영역별(통계 연구, 질적 연구, 정책연구)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그렇지만 각 챕터가 각각 완결된 하나의 글로 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책을 읽어나가야 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서 가장 관심 있는 장을 먼저 펼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연구를 막 시작하려는 초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엮은 개론서이지만, 모든 기본서가 그렇듯이 결코 완전히 소화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책이다. 따라서 각 장을 읽으면서, 필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관련 영역의 문헌들을 찾아 읽어보는 것을 병행하는 등 이 책을 일종의 길잡이로서 사용한다면 좀 더 좋은 독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에 따라서 교과서의 부분 부분을 묶어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예시일 뿐이다), 이 책의 구성을 여섯 덩이로 다시 묶어 배열하는 것도 가능하다. 첫째, 2장, 8장, 13장은 그간 청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류적인 지식체계에 가까웠던 노동/일자리/이행 영역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일별한다. 변금선(서울연구원)은 오늘날 청년연구를 추동하는 가장 주요한 개념이 되는 ‘이행기’를 이론적으로 소개하고, 이 개념의 의의와 실제 적용, 나아갈 방향 등을 탐색한다(2장). 정세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연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들을 소개하고, 통계연구를 실제로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세밀하게 짚고 있어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13장). 문수연(중앙대)은 청년의 노동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연구가 너무 많았고, 어떤 종류의 연구가 잘 없었는지를 비판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대안적인 통찰을 주는 소수의 연구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8장).

둘째, 9장과 10장은 최근 청년과 관련된 사회의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특히 두 챕터는 불평등의 문제를 통계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양적인 불평등으로 협소히 보지 않고, 한국사회가 처한 실제적이면서도 담론적인 현실, 불평등을 마주하는 학계의 방식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김정환(아주대)은 세대내 불평등의 문제를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렌즈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생생한 연구사례와 함께 보여주며, 불평등이라는 문제설정을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청년들 간의 ‘다름’을 제기한다(9장). 조민서(위스콘신-매디슨대)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이라는 말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현상 자체를 하나의 증상으로 파악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 위기라는 거시적인 배경을 도입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 담론을 좀 더 풍부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10장).

셋째, 1장과 5장은 페미니즘의 이론적 렌즈를 통해서 청년 담론과 청년의

제를 비틀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 물론 교차성과 페미니즘은 두 챕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챕터에 다시 적용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낯설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즉, 교차성과 페미니즘 자체를 보편과 거리가 먼 특수한 것으로 종별화함으로써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 중의 하나로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정성조(중앙대)는 이 책의 전체를 여는 글(1장)에서, 칼만하임의 세대사회학 이론을 소개하면서 ‘청년세대’라는 문제설정 자체의 사회적 구성성을 확인시킨다. 아울러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인 ‘청년세대’ 담론에 개입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으로부터 발전해 온 교차성 개념이 매우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미현(페미니스트 연구웹진 FWD)은 그간 청년 일반의 실천과는 별도의 범주에서 논의되어 온 최근의 ‘여성 청년’ 연구들을 꼼꼼히 되짚어가며, 청년연구를 포함한 학술 연구에서 성별(gender)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에게 던진다(5장).

넷째, 청년정치와 청년운동에 대한 챕터를 합쳐서 청년과 광의의 정치(politics) 사이의 관계가 학술 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확인하고 연구에서의 대안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서의 대안까지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기도 한 박희정(성공회대)은 정치학 영역에서 청년 문제로 다루어져 온 탈정치화, 보수화, 정치세력화, 정치적 대표성 등의 개념 및 실제 연구들을 소개한다(4장). 특히 이러한 연구가 생산한 지식이 실제 현실 제도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러나 흥미를 더한다.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가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영(청년유니온)은 이러한 위치성을 살려, 부문운동으로서의 ‘청년운동’을 다른 기존의 문헌들을 적절하게 분류하여 제시한다. 특히 청년운동을 연구할 때 연구자와 현장 사이의 거리 설정 문제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과 공유한다(6장).

다섯째, 7장, 11장, 14장을 함께 묶어서 청년담론과 청년에 대한 지식 만들기를 둘러싼 권력 투쟁을 이해해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 권수빈(안동대)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글을 서술했다. 특히

필자는 질적 연구의 기준으로 꼽히는 성찰성이 수반되지 않은 청년연구가 연구 참여자인 청년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적절하지 못한 질적 연구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음을 잠재적 연구자인 독자들에게도 함께 경고한다(14장). 14장에는 청년과 관련해 매우 유명하거나 권위 있는 저작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7장과 11장의 기존 연구 분석 역시 질적 연구를 통해서 형성되는 청년 담론에 동반되는 권력의 작용은 없는지, 대안적인 담론 쓰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준다. 청년의 부채 문제 등을 연구해 온 천주희(문화사회연구소)는 청년 담론을 읽고 또 쓰는 주체로서 사고 하였던 자신의 연구 경험을 충분히 글에 녹여내면서, 기존의 청년 담론이 청년을 어떠한 유형의 주체로 그려내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지식화에 일정한 위험은 없는지를 이론적으로, 또 사례를 통해 짚어내면서, 향후 연구자들이 유의할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11장). 채태준(청년오픈플랫폼Y)은 청년의 문화실천과 라이프스타일을 다룬 연구들이 청년의 ‘정주와 이주’와 같은 공간적 실천에 주요한 관심을 보여왔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러한 연구 작업들이 결코 ‘청년’에 대한 담론정치와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읽는 작업, 그리고 새로운 연구를 쓰는 작업에 성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7장).

여섯째, 3장, 12장, 15장은 청년과 관련한 정책의 설계와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 전환에 관해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 권민경(서강대)은 청년과 지역이라는 맥락이 만날 때, 인구유출과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주범으로 청년이 소환되는 일상적인 풍경이 어떠한 지식 체계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비판한다(12장). 일자리, 생활환경 등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면서, 지역의 청년정책이 청년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과 같은 담론의 외삽이 아니라 결국 당사자인 ‘지역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연하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워보이는 관점의 전환은 좀 더 철학적인 차원에서 정준영(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이 제기하는 ‘권리 기반 접근’과 만난다(3장). 청년정책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은 결국 청년을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바탕에서 청년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이

책을 닫는 글에서 한국의 청년정책 연구를 이끌어온 서복경(서강대)은 최근 청년 정책 관련 연구의 급증과 경향을 세밀히 살피면서, 청년정책 연구가 ‘정책 실천’의 일부였음을 환기한다.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 수행에 있어서도 연구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윤리를 제시한다(15장).

### 도움을 주신 분들

<청년연구자 되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충분하지 않은 원고 작성과 교정 일정, 각자의 바쁜 연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들을 모아주신 필진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김태환(청년인정협동조합), 신새벽(민음사), 엄창환(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한솔(민음사), 조은주(나눔자리문화공동체) 선생님이 자문에 참여해 큰 도움이 된 의견을 많이 주셨다. 중간보고회에서 기꺼이 토론을 맡아주신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원고 방향을 더욱 섬세하게 만들 수 있었다. 기현주(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김영미(연세대), 김유휘(한국보건사회연구소), 류연미(서울대), 신소희(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오혜진(성균관대), 조은주, 최성용(성공회대) 선생님들이 참여해주셨다. 중간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실무를 함께 챙겨 준 청년오픈플랫폼Y의 송효원, 이성휘, 앰튼디자인의 박현미, 청년몽땅협동조합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책은 서울특별시 청년청의 <2020 세대균형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서 제작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상의하여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이정민 주무관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청년학 교과서 제작 프로젝트 소식을 알릴 때마다 힘이 되는 말을 건네주고 함께 기대해주고 기다려준 동료 청년 활동가들에게, 격려나 응원 또는 경외 같은 다른 표현보다는 동료애를 표현하고 싶다.